

정부가 대기업의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,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5.28.(목) 한국경제, [사설] ‘사회연대임금’ 화두 띄운 노동부, 기업에 강제할 일 아니다. 조선일보 [사설] “분배” 주장 노동장관, 세계 반도체 경쟁 생각이나 해봤나, 중앙일보 [사설] 반도체 ‘초과이익’ 분배하자는 노동부 장관
 - 김장관은 “국민기업이 잊지 말아야 할 게 협력업체 동반 성장”이라며 “좋은 제안을 내놓길 기대한다”고 삼성전자를 압박했다.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지만 대기업들의 이익 배분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. 등

2. 설명 내용

- 정부가 대기업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·취지와 전혀 맞지 않음
 -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, 그럴 생각도 없음
- 삼성전자 임금협약을 계기로 성과 배분의 공정성, 노사·노노·주주간 갈등, 자본시장 리스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음
 - 정부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확대되는 노동자간 격차를 해소하고, 원·하청 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갈 계획임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부용 (044-202-7740)
	노동정책총괄과	담당자	서기관	김대원 (044-202-7742)